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평촌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818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0월 13일 (음력 9월 15일) 월요일

# 미,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 北 핵 불능화 작업 복귀…6자 회담 정상화 기대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6면〉

정부는 환영 입장과 함께 6자회담 정상화, 북핵폐기 계기 마련 등 기대를 나타냈으며, 북한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과 함께 불능화대상 핵시설 검증에 협력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국 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일단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위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됐으며, 북미간 핵검증 합의를 추인하기 위한 6자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 간 검증체계 협상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정부는 6자회담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재개하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원들의 임무 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기관 오늘부터 국감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비롯, 11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13일에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대·전남대병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을 받고 14일에는 광주고법·광주지법, 광주고검·광주지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을, 광주지방노동청·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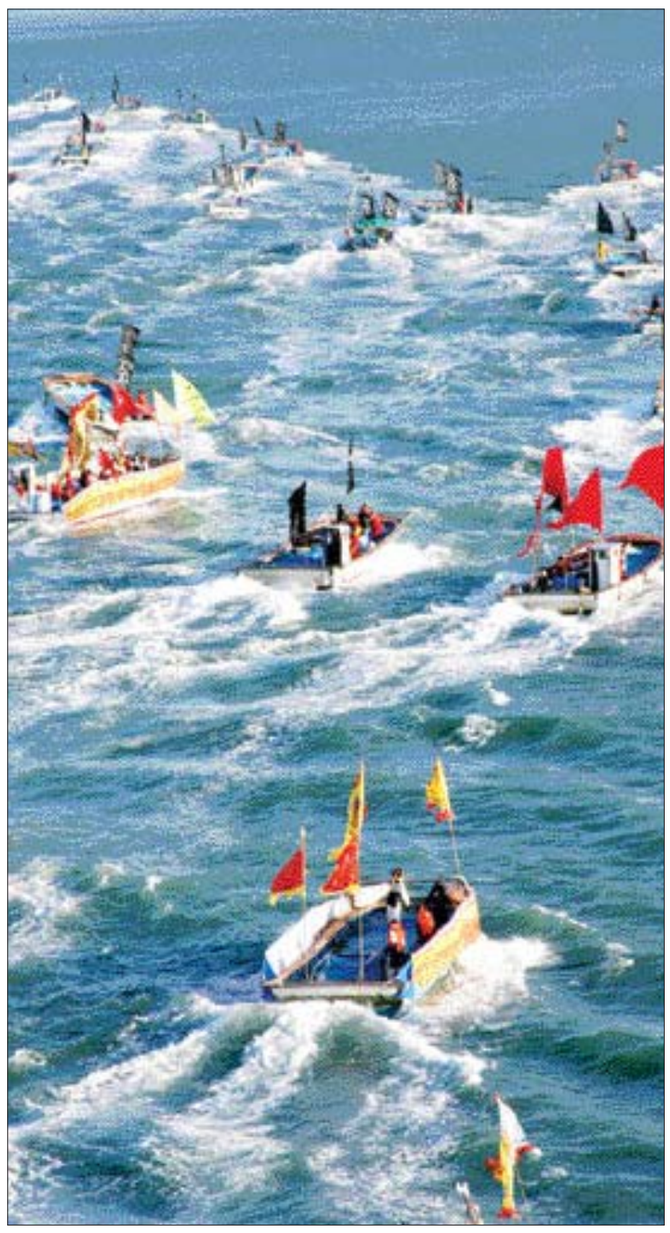
배식구를 허리 높이로 올려 다시 짓기로 한 장흥교도소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시찰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또 16일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을, 21일에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을 각각 받는다.

이외 광주지방관세청은 13일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관세청과 함께 국감을 받게 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과 국감을 받게 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광주시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지방공기업, 문화수도 조성사업 등이, 광주고검·지검은 현역 국회의원 수사의 정확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명량대첩 재현** 전남도는 지난 11일 해남 우수영과 진도 벽파진 사이 울돌목 일대에서 100여 척의 선박을 동원,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 배를 무찔렀던 명량대첩 당시의 실제 해상전투 과정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관련기사 13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인요양보험 시행 100일

## 광주·전남 혜택 4~5% 뿐 돈벌이 아닌 복지 인식을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로서 순기능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 3개월 만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할 정도로 낮은 수혜율, 서비스질 저하, 요양 보호사 관리·감독 부실 등 허점도 많았다.

◇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천차만별=올해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각각 11만6천457명(전체 인구의 8.2%)과 33만7천407명(17.3%)이다. 이중 노인요양보험의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광주 5.5%, 전남 4.2%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순과 보성, 신안 등 일부 전남지역은 1~2%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혜택을 보고 있는 가정에서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에는 요양시설만 156(광주 45·전남 111)개소, 재가시설(방문서비스)은 925(광주 367·전남 558)개소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 과다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재가시설은 '빨래와 청소도 해줍니다' '돈도 깎아 드립니다'는 식으로 노인들을 유치해 요양 및 복지서비스보다는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복지서비스에 충실한 재가시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관리감독 부실=노인요양보험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광주·전남 2만5천77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만2천577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가 양성됐지만 이들의 자격 관리·심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광주·전남지역에만 103개에 달할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자격증을 발급하는 공무원 수는 광주 1명, 전남 1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광주에서 2곳, 전남에서 3곳의 교육기관이 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고, 최근에는 돈을 받고 출석시간을 부풀려 준 광주 모 간병협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일정시간만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발급제도도 함량 미달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은 전체 자격증 취득자 대비 23%(3천63명), 전남은 29%(3천63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요양보험은 건보에서, 요양보호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2008년 10월 16일(목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강당(구 중앙도서관 옆)
주요 안건 (1) 임원선출 (회장 등) 에 관한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문의 : ☎ 228-0197~8, 225-3293
2008년 10월 13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 이원구
조선대학교